1996년 미국 대선과 對남북한 관계

김영환
美 아이오와주립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전은 '민주당' 후보인 클린턴 대통령이 '공화당'의 도울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재선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관심을 끈다. 1992년 선거와는 달리 올해는 페로 등의 제3당 후보들이 선거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30~40년대에 연임에 성공한 이후,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화당은 아이젠하워, 레이건 그리고 닉슨 대통령이 재임 중 재선에 성공하였다.

이번 미국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반면, 공화당은 상·하원 양원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번 미국의 선거 결과는 어떠한 요소에 기인하며, 어떠한 중요성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승리는 향후 미국의 對아시아 태평양 정책과 대남·대북, 對남북한 관계에 어떠한 의미를 지닐 것인가?

민주당의 승리 요인

우선,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외교 정책보다도 국내 정치 문제에 집중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의 제1기 임기 재임 기간 중 미국은 견고하고 활력있는 경제 성장, 낮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실업률 등으로 경제 사정이 양호하였다. 반면, 도울 후보는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선거 이슈 개발에 실패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대신 클린턴 대통령의 '정직성'과 '성실성' 등을 문제시하는 유권자들이 절감하지 못하는 모호한 선거 이슈에 집착하였다. 도울 후보로서는 불행하게도, 미국의 유권자들은 금년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의 인격'이라는 선거 이슈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았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도울 후보의 15% 세금 감면 공약에도 불구하고 그와 행보를 같이 하지 않았다. 도울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은, 젊은 이미지와 '21세

기로의 가교 건설'이라는 시의 적절한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호응을 얻은 클린턴 대통령의 적수가 되지 못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는 외교 정책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이제 선거의 부담이 없어졌으므로 향후 4 년 임기인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보다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외교의 경우에는 지난 9월 18일 남한의 동해안에서 좌초,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북한의 잠수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클린턴 대통령의 지난 4 년 재임 기간 중 취한 외교 안보 분야의 이니셔티브들을 보면, 클린턴 대통령의 향후 4 년 임기 중의 정책 방향과 지침들에 대한 유추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지난 4 년의 제1기 재임 기간 중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들에 근거해볼 때, 클린턴 행정부의 향후 對한반도 정책은 1996년 말 현재의 기본 틀과 흐름의 연장선 상에서 지속될 것으로 최소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미국의 세계 및 태평양 장책

클린턴 대통령은 첫 임기 중 10만여 명에 달하는 아시아 지역(유럽에서도 이미 취한 바와 마찬가지로) 주둔 미군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지속적인 강대국 역할을 재천명하였다. 미국의 對일본 동맹국 관계 유지는 새로운 세기의 도전에 결연히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대외 공약의 중요한 토대 역할을 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안정'을 아시아 정책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는 '타이완해협 사태' 발생시 사태 해결을 위해 신속히 항공모함을 파견한 바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파치' 헬기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한 바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대외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 정책 의제에는, '민주주의 강화', '경제 통합 활성화', '지역 안보협의체제 구축' 및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인들의 경제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제2기 임기 기간 중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체적인 유형을 띠고 안정을 보다 강화하는 데 중점이 두어질 것이다. 첫째, 미국의 對동맹국 관계 강화(일본, 남한 및 기타 아시아 지역 우방국) 둘째, 중국과의 관계 강화 셋째,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진영 확대이다. 이러한 클린턴 대통령의 안정 강화 정책은, 지속적인 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역내 평화를 위해서는

지역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 전망

한반도와 관련하여 특히,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모든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남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외교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지시키는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강구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영구히 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냉전의 마지막 장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의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제안한 '4자회담' 제의를 북한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이 1994년 미국과 체결한 제네바협정을 계속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내'와 '확고한 의지'에 기초한 강온 정책을 함께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또한 자국과 남한간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갈라놓기 위한 북한의 시도를 계속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 남한 관계

클린턴 대통령은 자신의 두번째 임기 중 미국과 남한 양국의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또는 1998년에 취임하는 김대통령 후임자와 공동으로 45 년에 걸친 양국간의 동맹 관계를 재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한 공동 합의는 클린턴 대통령이 1996년 4월 일본 방문시 발표한 미일안보협약의 지속적인 유지에 대한 공동성명문과 맥을 같이 할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와 김영삼 행정부는 지난 4월 16일 제주도에서의 양국 정상회담시 공동으로 제안한 '4자회담'의 성사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4자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대응 여하와 구체적인 이슈들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의제를 안건에 포함시키자는 북한측의 요구 등 - 에 대한 계속적인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근본 토대와 전제에 대한 재검토 · 재평가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 북한 관계

클린턴 대통령은 두번째 임기 기간 중 대북관계에 대하여 1994년 10월의 양국간 제네바

협정 사항을 계속 이행하면서, 이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북한의 핵동결과 야심적인 핵개발 프로그램의 포기 - 적절한 수순에 따라 - 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경수로 2기 - 국제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한국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해 건설 예정 - 를 공급하고, 경수로가 완공되어 가동되기 시작하는 2003년까지 중유를 공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소극적인 안정 보장'에 합의한 것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잔류키로 약속한 데 대한 반대 급부로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양국 수도에 상호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또한 미국과 북한 양국간에는 핵확산금지조약 문제와는 별도의 추가 사안들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는 실종 미군 문제, 미사일 기술 통제, 연락 사무소 설치 및 양국간 관계 격상 등의 사안들이 포함될 것이다.

맺는말: 미국의 對남북한 관계 전망

향후 남북한 관계와 관련하여 클린턴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클린턴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영향으로 다음과 같은 별도의 두 가지 코스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국과 남한간 기존의 동반 관계가 20세기 후반 반세기에 걸친 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세기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남북한간의 대화가 재개되고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구할 것이며, 이것이 남북한의 통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클린턴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 비생산적인 고립 정책을 포기하고,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 부족 사태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연착륙'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유지 및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한의 핵개발 능력 보유를 저지하고 남한과 일본 모두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652 마일의 사정 거리를 지닌 노동1호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統